사 설

멸빈제도 다시 생각하자

조계종의 종헌에 정해진 멸빈이란 징계는 흔히 사회법의 사형제도에 비유된다. 사실상 구제의 여지가 없이 승단에서 추방되는 중징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헌의 개정 없이는 멸빈자를 구제할 길도 없고, 또 종헌개정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들게 된다. 종교인이 앞장서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마당에 종단법이 사형제도에 다름 아닌 멸빈제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그런 맥락에서 멸빈 조항에 대한 근원적 반조가 필요하다. 징계가 불가피 할 경우, 승단 일원으로서의 자격은 유지시키되 공직을 비롯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선에서 참회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들도 실제로는 승려의 길을 걷고 있고 종단의 자원이 아닌가. 돌이켜 보면 조계종의 멸빈제도는 정치적으로 이용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래서 '멸빈자 문제'가 늘 종단분규의 앙금으로 남는 형국이 유지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

진정한 개혁은 이해관계를 초월한 자리에서 낡은 것을 고쳐 나가려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난 21일 발표된 조계종 원로회의의 결의문은 종단 어른들이 내리는 또 하나의 가르침이다.

차제에 멸빈제도와 관련, 조계종 구성원들이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불교는 살아 있는 중생의 구제는 물론 우주 만물과 지옥중생까지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의 종교가 아닌가.

3보1배 참뜻 헤아리라

삼보일배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1일 극도의 피곤과 체력 저하로 쓰러졌던 수경스님은 몸을 회복하지 못했으나,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아스팔트로 돌아갔다.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 이희운 목사, 김경일 교무의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이다. 그러면서도 육신의 안위보다는 개발이면 무조건 좋다는 식의 세태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수행자와 성직자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분께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네 분의 삼보일배가 단지 새만금 간척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새만금 신구상 기획단의 구성을 촉구하는 몸짓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 물론 새만금 간척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바라는 바가 없지는 않다.

새만금 문제는 87년 대선을 앞두고 전북도민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서 비롯되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잘못된 출발이었다. 방조제 공사를 일시 중지해 갯벌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전북도의 발전 방안을 찾아보자는 합리적인 제안인데도 정부의 반응은 더디기만 하다.

삼보일배의 참뜻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죽임의 문화와 투쟁의 독기운' 그리고 '동체대비의 세상은 간 곳이 없고, 난개발과 학살만이 전지구적으로 한 몸'인 과거와 현재를 참회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명 · 평화의 날을 맞이하려는 염원이다. 이 뜻을 헤아린다면, 새만금 문제는 저절로 풀어진다.

따라서 새만금 문제는 정치와 경제 또는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봄이며, 생명과 평화로 나아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유승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군종장교 종교·선발기준 모호하다

조계종 국방부에 병역법시행령 보완 의견서 제출

조계종이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의 군종장교 파송과 관련된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은 군종장교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등의 조항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16일 국방부에 전달했다.

조계종이 수정보완을 요구한 것은 군종장교 파송 종교 선정기준이나 군종장교 선발 기준이 모호하고, 모호하거나 시행령에서 명시돼 있지 않은 필요한 사항들을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해놓은 점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계종이 지적한 사항은 모두 네 가지다. 우선 군종장교 병적편입대상종교(군종장교 파송종교) 선정기준에서 종교의 교리나 군내 신자수, 군내 여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부분이다. 조계종은 이같은 명시가 없을 경우 군내 군종활동에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파송종단 선정시 기존 파송종단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또 군내 신자수나 종교의식, 행사 수행여건 등 군종장교 운용에 필요한 규모를 수치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군종장교 파송종단 선정시 이를 심의하는 국방부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출석 3분의2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군종장교를 파송할 수 있는 '종단'과 '학교'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병적편입대상 종교로 지정된 종단에서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학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토록 하고 그 기준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즉, 국방부가 군종장교를 파견할 수 있는 학교(대학)를 일방적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군종장교운영심사위 구성에 있어서도 불교, 개신교, 천주교에서 추천하는 각각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선정토록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종교교리·군 신자수·여건 등 불명확
운영심사위 의결 정족수 출석 2/3로
위원 불교·개신교·천주교 1인이상 선정
종단지정학교 출신 군승 선발·파견을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학 결집대회 신청자 쇄도

마감 10일 앞둔 현재 200명 넘어

1년 가까이 남은 제2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대회장 종범)가 벌써부터 화제다. 신청 마감(30일)을 10일 가량 앞두고 논문 발표 신청이 200명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신청자의 20%가 외국학자로 나타나 '국제학술대회로의 위상 격상'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도 나오고 있다.

2회 결집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해주)는 20일로 논문 발표 신청자가 200명을 넘어서 201명이 발표 신청서를 냈다고 21일 밝혔다.

교수 82명, 박사학위를 가진 강사 78명, 박사과정에 있거나 수료한 사람 41명이 신청서를 내 전체의 80%가 박사학위 소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집대회는 석사학위 소지자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2회 대회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일은 외국학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신청자 201명(21일 현재) 중 외국학자는 41명. 지난해 1차 대회 때 2명에서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41명 가운데는 26명이 교수이고, 세계적 유식학자인 슈미트하우젠 교수(독일 함부르크대학)를 비롯해 세계 불교학계의 원로급 학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라별로는 일본 28명, 중국 9명, 미국 · 폴란드 · 벨기에가 각각 1명이다. 조직위는 신청 마감인 30일까지는 '적어도 5~6명의 외국학자가 더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위원장 해주 스님은 "세계 불교학계에서 한국불교는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해외 불교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직접 접함으로써 국내의 젊은 연구자들에게도 자극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조계종책 과제 설문조사

총무원, 6월초 결과발표

조계종 총무원이 제31대 집행부가 추진할 종책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앙종회의원, 불교계 언론사, 각 신도단체, 사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번 설문은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제시했던 공약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면 복권과 관련한 문제 △종무체계 및 중앙종무기관 개편 △중앙종무기관의 예산과 분담금 △총무원의 종무 행정 지침 시달과 본말사 협조 관계 등에 대한 질문 29가지를 담고 있다.

총무원은 6월초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종교유적지 대화 순례

KCRP, 28일~30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2003년 종교유적지 대화 순례'를 진행한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각 종교 성지를 돌며 종교간 연대와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하동 쌍계사(불교), 성공회 대성당(개신교), 해미읍성(천주교), 익산 원불교총부(원불교), 전주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관(천도교), 지리산 청학동(민족종교), 청주향교(유교) 등을 순례한다.

남동우 기자

국보 불상 강탈사건

용의자 2명 검거

국립공주박물관 국보 강탈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공주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2일 유력한 용의자 2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2명을 추적하는 한편 강탈한 불상 등 국보급 문화재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금동불상 등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국보 회수에는 난항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권형진 기자

내년 불교문화재 보수예산 사찰·각 시도 917억원 요청

5월말

불교문화재 보수와 관련 사찰과 각 시도가 문화재청에 신청한 예산이 15일 현재 347건에 91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태섭 문화재 청장은 20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불교문화재 보수 요구액 917억원은 전체 5,354억원(1,462건)의 17.1%로,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917억원(347건) △문화재청 직영보수사업 42억원(5건) △사찰문화재 일제조사 8억원(1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법장스님은 "매년 전체의 16~17%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불교문화재 관리가 어렵고, 전체 문화재 중 불교 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예산을 더 배려해야 한다"며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에 노 청장은 "올해 불교문화재 관리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법장스님은 "현행의 시설적 보조(예산을 정부가 운영하는 것)는 문화재 소유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심 민 섭

소년 소녀 가장 및 독거노인 돕기

도봉산 도봉사 산사 음악회

사 회 : 배유정
출연진 : 뮤지꾜레, 안치환과 자유, 신형원
임지훈, 소리새, 손병휘, 남 진, 장미화
문희옥, 문영미, 이진희(소프라노)
일 시 : 2003년 6월 1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
장 소 :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산 內
도봉사 대웅전 앞 특설 무대

교통편 : 시내버스 19번, 좌석버스 2번종점
지하철 1,7호선 도봉산역 하차
※버스종점에 대형주차장 완비

후원:한신공영(주), 조흥은행, 골든에셋플래닝(주) 협찬:도봉구청, 도봉경찰서 공연문의:대한불교조계종 도봉사(02)954-1112